

검사 수사지휘 사항 대통령령으로

수사현실 반영 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상정해 재석 200인 중 찬성 175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의원들의 친반대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20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 반대로 본문자로 나선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정부에서 어렵게 합의안을 만들어 사기특위에서 만장 일치로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수정, 의결했다”며 “오랜만에 검·경 양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따른 개정안을 임크가 마르기 전에 수정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인기, 민주당 유선호·정범구 의원 등은 찬성토론자로 나서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는 검찰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실의 법제화 정도의 법안 처리에 있어서도 국회가 검찰의 반발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가의 기강이 훌들리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앉으면서 국민을 호령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또 제196조를 고쳐 경찰관에 대한 검사 수사지휘의 구체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는 ‘모든 수사’로 정했다.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이 가운데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관의 임용자격을 ‘검사·변호사·법학 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러(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청법도 고쳐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후보자에게 주권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본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장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형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법 ▲출입국관리법 ▲사면법 ▲공작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애초 국회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혼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 선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환영사 듣는 검찰총장

김준규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세계검찰총장총회 개회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환영사를 듣고

/연합뉴스

이대통령 “검찰, 국민 입장서 생각해야”

靑, 검찰 수뇌부 사퇴 움직임에 설득 나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퇴 움직임과 관련, 청와대가 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검찰총장회의에 참석, 영접 나온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검찰 동향을 보고받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리인도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물밑에서 모든 채널을 동원, 검찰 설득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민정 라인 관계자는 “검찰 분위기도 파악하고 설득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지휘권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검찰이 수뇌부 사퇴 까지 거론하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자칫 국민에게 ‘입법권 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점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지나친 기우”라는 반응이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은 정부의 의견을 통합하는 의미만 있지 정치권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지휘권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우기자 tuim@kwangju.co.kr

이 대통령은 이어 “검찰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리인도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바쁘게 움직였다. 물밑에서 모든 채널을 동원, 검찰 설득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민정 라인 관계자는 “검찰 분위기도 파악하고 설득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산장려 프로젝트!!

제2회 마이티비 주부가요제

일 시 | 예선 : 2011년 7월 3일(일) 오후2시

본선 : 2011년 7월 10일(일)오후2시30분

장 소 | 광주디자인센터 콘서트홀(첨단지구)

참가대상 | 광주·전남지역 주부

주 관 | 마이티비 www.mytv.or.kr

후 원 | 우리밀리oadm@naver.com 오월포럼

- 대 상 : 상금 80만원, 상장
- 은 상 : 상금 20만원, 상장
- 인기상 : 상금 10만원, 상장
- 금 상 : 상금 30만원, 상장
- 동 상 : 상금 10만원, 상장
- * 참가자 전원 고급도서 증정

참가접수 : www.mytv.or.kr 참가문의 : 062)528-2929

협찬 : (주)가인기획, (유)교육뱅크, 반트사운드, 대건이앤엘, (주)두손인테리어, 성진STP, 유하디자인, (주)태조전기, (주)미주코리아, (주)비즈온소프트

내년 총선 대비 108국서 2차 모의 재외선거

선거인단 5천여명

시스템 점검 주안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제2차 모의 재외선거가 30일 오전 7시 뉴질랜드를 필두로 세계 108개국 157개 공관에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각 나라의 현지시간 기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지며, 7월 1일 낮 12시 미국 하와이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을 끝으로 종료된다.

이번 모의 선거에는 미리 선거인 등록을 마친 교민과 국외부재자 5484명이 참여,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선거인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4203명이 투표해 평균 38.2%의 투표율을 나타냈다.



을 나타냈다.
중央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의 선거는 전산시스템 등 선거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데 주안점이 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28개국 55개 공관에 직원 1명씩을 파견, 선거에 대비해 왔다.
/연합뉴스

한은법 개정안 국회처리 무산

한국은행의 금융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오후 3시50분께 안건 상정 직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상정을 전격 철회했다. 정무위원회가 배제된 게 문제였다.

본회의 사회를 맡은 흥재형 국회의장 부의장은 이날 의사 진행 중에 “의사 일정 제51항 한은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순서지만, 고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구 교육환경 개선비 작년 14억 이어

장병완 의원, 올해도 5억원 추가 확보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은 지난달 30일 “광주 남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지난해 14억8600만원의 교육과학 기술 특별교부금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도 5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교과부 특별교부금은 남구 양립동 학강초등학교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앞서 노후화된 효덕동 주민센터의 신축을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리스 디플트 위기 넘겼다

긴축안 의회 통과… 유로존 등 구제금융 받아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협상을 통해 확정한 긴축안이 29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유로존·IMF 등이 제공키로 지난해 약속한 구제금융 중 5차분을 내달 중순에 받아 당장의 디플트(채무불이행) 위기를 피하게 됐다.

‘중기 재정 계획’은 오는 2015년까지 총 280억유로(국내총생산 대비 12%)를 확보하는 지출축소와 수입 확대 조치들, 총 500억유로를 확보하는 국유자산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오후 긴축안과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은 ‘중기 재정 계획’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 등으로 승인했다. 총 300명 중 2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오후 긴축안과 민영화 프로그램을 담은 ‘중기 재정 계획’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 등으로 승인했다. 총 300명 중 2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그리스 의회가 유로존과 IMF 등이 구제금융을 계속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긴축안을 입법화함에 따라 그리스발(發) 재정 위기가 다소 누그러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1년도 간방학반
“가정폭력상당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여성가족부인정)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1년 7월 4일(월) ~ 8월 5일(금)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 접수기간 : 2011. 6. 24(금)까지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 강 류 : 22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 광신교육원(가포)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 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①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별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달자는 제적처리함.)
- ②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① 신청서(소정양식)
-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③ 신분증 사본
- ④ 사진 2매
- ⑤ 경력증명서(해당자)
- ⑥ 자격증 사본(해당자)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70번지
교학처 (062)605-1112, 1063